

01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활약과 언론의 기생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는 너무 많은 소위 사이버 레커¹⁾발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 불법행위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 2025년 2월 배우 김새론 사망 이후 그와 배우 김수현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수많은 사이버 레커를 끌어들이고, 사건 후 몇 달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가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유독 연예인 이슈에 사이버 레커가 몰려드는 이유는 연예인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인데다, 정치·사회와 같은 경성 주제와 비교했을 때 연예인 관련 정보의 공적 가치는 낮다고 여겨지는 터라,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따른 윤리적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데, 가까이는 2023년 배우 이선균이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사이버 레커의 이어지는 의혹 제기 속에 사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사이버 레커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여러 규제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이버 레커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행정적 규제의 경우 유튜브가 해외 기업이 소유한 플랫폼인 터라 국내법을 통해 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최진웅, 2024).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 처벌 강화나 유튜브를 방송법에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시도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의 행정적 규제 시행,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구속력 있는 자율규제안 도출 등이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금준경, 2024, 7, 17).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또 다른 지점이 있다. 사이버 레커가 활개치고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을 오직 유튜브의 일탈행위로만 볼 수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유튜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레커가 찍어내는 저질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며 사이버 레커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언론도 이 사태의 공범이다.

1) 사이버 레커는 사이버 공간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짜깁기 정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자극적 해석을 바탕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의미한다. 관련 영상을 올리는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레커·wrecker)처럼 빠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이버 레커의 활성화 노릇하는 기성언론

언론은 사이버 레커를 출처로 삼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 폭로, 뒤이은 유튜버 이진호의 해당 폭로에 대한 반박이 각각 있는 후 8일 동안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폭로를 거의 똑같이 받아 보도한 언론 기사 수가 무려 2,151건에 이르렀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03, 24).²⁾

언론의 사이버 레커 받아쓰기에 대한 논의에 있어 또 생각해 볼 지점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언론이 이 같은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지다. 언론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그 목적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인 다양한 종류의 언론이 존재한다. 10여 년간 인터넷언론의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만 2025년 6월 기준 1만 2,000개가 넘는다.³⁾ 이 중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언론만 골라 낸다 해도 그 수는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언론으로 뭉뚱그려 표현되는 집단 가운데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보도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동시에 이를 실행할 능력을 갖춘 언론도 있는 반면, 애초 양질의 보도에는 관심 없이 오직 상업적 목적에서 운영되는 언론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특히 돈벌이만 추구하는 언론이 주로 사이버 레커 폭로 받아쓰기에 골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규범적으로는 양질의 보도를 지향하며 비교적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성언론⁴⁾은 사이버 레커로 대표되는 유튜브발 저질 정보 전달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아마도 지지되지 않을 것 같다. 소위 전통언론도 유튜브발 폭로, 의혹 전달에 있어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이 201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국 종합일간지 9개, 경제

2) 분석의 대상은 네이버 포털에서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를 편집하는 '언론사 편집판'의 구독자 수가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스포츠/연예'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24개 언론사였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경우 첫 폭로 영상을 올린 2025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간, 이진호의 채널 역시 관련 영상을 처음 올린 2025년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을 분석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과 이진호의 주장을 거의 똑같이 받아 전달한 기사의 수를 구분해 살펴보면 각각 2,026건, 125건이었다.

3) 문화체육관광부 (n.d.).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URL: <https://pds.mcst.go.kr/main/press/selectPressList.do>

4) 기성언론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장 이전부터 존재했던 정보 유통 방식(신문, 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 뉴스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도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을 통칭한다.

지 2개, 방송사 4개, 기성언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1개⁵⁾에서 유튜브 또는 유튜버를 출처로 하는 기사를 얼마나 실었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 기사는 총 9,016건이었다(노지민, 2025, 5, 9). 이중 특히 문화기사(3,489건)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방송, 연예 관련 기사는 2,845건이나 됐다. 즉 주요 기성언론도 유튜브에서 떠도는 정보를 인용해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2025, 3, 24)의 분석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와 이진호의 폭로를 가장 많이 받아쓴 곳은 TV리포트(136건), 엑스포즈뉴스(122건), OSEN(95건), 뉴스엔(90건), YTN(87건), 스포츠조선(83건), 머니투데이(69건), 스포츠경향(60건) 등이었는데, 전통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케이블 보도전문채널 YTN도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빈번하게 인용,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언론의 유튜브 받아쓰기가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주지할 점이다. 기성언론은 자사의 핵심 플랫폼에서는 받아쓰기 보도를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도, 유튜브 채널 또는 별도의 자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버 레커발 기사 보도에 골몰하고 있다. 즉 전통언론은 신문, TV,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 같은 핵심 플랫폼에서는 저널리즘의 규범을 따르되, 샷길을 이용해 자극적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새론 사망과 관련한 사이버 레커들의 폭로에 대응하는 배우 김수현의 기자회견이었다. 지상파(KBS,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 MBN),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 지역방송(OBS, KNN)은 3월 31일에 있던 기자회견을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박서연, 2025, 3, 28). 또한 기성언론은 KBS 스타연예, iMBC, SBSi, SBS funE, YTN Star와 같은 별도 채널 및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튜브발 연예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기성언론이 사이버 레커의 연예인 관련 폭로 받아쓰기에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차적인 이유는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의 ‘조희수 지상주의’ 때문이다. 뉴스는 그보다 훨씬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또 개별 언론사는 그 수많은 언론 가운데서 이용자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5)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문화일보), 방송사(KBS, MBC, SBS, YTN),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인터넷신문(노컷뉴스)이 분석대상이었다. 노컷뉴스는 CBS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인 터라 전통언론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조회수는 인터넷광고수익과 직결될 뿐 아니라 언론사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언론사 역시 조회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조회수 지상주의가 가장 충실하게 적용되는 공간이 바로 유튜브다. 유튜브는 정확히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인 터라 유튜브 공간에서 조회수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최상의 목표다. 공익성이나 사실성과 같은 규범적 판단은 뒷전이다. 언론, 특히 양질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기성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조회수를 높이기 쉽다 해도 사이버 레커가 만드는 것과 같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내는 것은 직업윤리상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가 만든, 조회수 올리기에 최적화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매우 손쉬운 방식으로, 동시에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조회수라는 단물은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기성언론의 사이버 레커 받아쓰기는 왜 큰 문제인가

기성언론의 사이버 레커 폭로 받아쓰기는 위험하다. 특히 평소 좋은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쌓아온 기성언론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이버 레커의 폭로를 두고 기성언론이 “OO가 이렇게 주장했다”, “OO 논란이 있다”라고 전달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① 해당 폭로 내용을 인증해 주는 셈이 되고, ② 기성언론이 지닌 정보 전파력 때문에 해당 폭로 내용이 정보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기성언론이 어떻게 저질 정보의 전파에 기여하는지와 관련해 허위정보의 확산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네트워크 프로파간다(Network Propaganda)에서 저자인 벤클러 등(Benkler et al., 2018)은 현 미디어 환경은 그다지 신뢰받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정보도 정보생태계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가 저질 정보를 받아쓰는 기성언론이라고 분석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이들은 약 400만 개의 기사를 분석하며 허위정보 확산구조를 파악했는데, 당시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주체는 극히 일부의 극우성향 온라인 사이트였다. 하지만 극소수가 양산하는 이 허위정보는 어느 순간 정보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했는데 이는 허위정보를 급속도로 전파하는 프로파간다 파이프라인(propaganda pipelin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성언론이다. 예를 들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저질의 정보가 해당 정보를 보도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성언론을 통해 일단 보도되면, 여타 기성언론도 이를 초기 보도한 기성언론을 인용하면서 전하게 되고, 그 결과 이 허위정보는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비록 기성언론이 해당 허위정보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검증한 바 없다 해도, 사람들은 ‘평소 신뢰받는 기성언론이 보도했으니 이 이야기는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의도와 달리 기성언론은 허위정보를 ‘확인’ 또는 ‘승인’하는 셈이 된다. 관련해서 인터넷 연구기구인 데이터앤소사이어티(Data & Society)는 보고서 〈확산의 산소: 극단주의, 적대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자에 대해 보도하는 올바른 방법〉(Oxygen of amplification: Better practice for reporting on extremists, antagonists, and manipulators online)(Phillips, 2018)에서 기성언론이 허위정보, 음모론의 확산을 촉진하는 산소 또는 연료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허위정보 맥락에서 진행된 또 다른 국내 연구는 한국 정보생태계에서도 기성언론이 저질 정보 확산의 파이프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현장에 즉각 방문하지 않고 언론사 사장단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허위정보가 돌았다. 이 정보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확산됐는지 살펴본 연구(김춘식·홍주현, 2020)에 따르면 애초 이 허위정보를 만들어 낸 것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었지만, 이 정보가 유튜브 전체로 확산하게 된 원동력은 YTN,

JTBC, 채널A 등 주요 기성 방송사의 받아쓰기 보도였다. 이는 기성언론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나 영향력 면에서 개인 채널보다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허위정보 맥락에서 진행된 위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기성언론의 사이버 레커 폭로 받아쓰기는 해당 정보 확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인식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양정애, 2024)에 따르면 유명인 사건·사고 정보를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로 ‘언론 보도’(78.5%)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64.2%), ‘SNS·블로그 게시물’(49.8%)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92.1%)를 꼽은 이들이 사이버 레커 자체의 의혹 제기를 문제 삼은 이들(93.2%) 못지않게 많았다. 좀 더 직접적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은 결과 ‘언론의 책임 소홀’(90.8%)을 언급한 이들이 ‘사이버 레커 자체의 비윤리성(92.6%)’을 문제 삼은 이들의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비록 폭로 자체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기성언론의 받아쓰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이를 폭로한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사이버 레커의 폭로를 전달한 것만으로 시민들은 언론을 사이버 레커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언론은 이 같은 인식조사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이버 레커 폭로를 인용·보도할 때 조회수는 반짝 올라갈 수 있고, 당장의 수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이버 레커 받아쓰기는 결국 언론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 사회, 경제 등 타 영역에서 양질의 저널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객관성 추구 관행이 받아쓰기를 조직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가능성

저널리즘의 원칙에 바탕해 생각해 보면 사이버 레커의 폭로를 받아 보도하는 것은 분명 윤리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결정이다. 사이버 레커의 폭

로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가 많고, 시민에 대한 충성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데도 그리고 진실보도의 원칙을 지키는 데도 명백히 해가 된다. 저널리즘 원칙에 기반한 직업윤리가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언론이 어째서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를 쓰는 것인가? 앞서 언급한 조회수 올리기, 돈벌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언론의 사이버 레커 폭로 받아쓰기는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객관성(objectivity) 추구 관행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잘못된 객관성 추구 관행이 받아쓰기를 조직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객관성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저널리즘 제1의 원칙으로 간주되는 진실보도를⁶⁾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은 종교적 진실, 과학적 진실 같은 절대불변의 진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취재 시점에서 밝혀낼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이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진실이다. 때문에 <워싱턴포스트>는 “확보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진실(the truth as nearly as the truth may be ascertained)”을 보도하는 것을 보도원칙으로 삼고 있다.⁷⁾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실(the best obtainable version of the truth)’을 보도할 것을 강조하곤 했다(Kovach & Rosenstiel, 2007). 객관성은 최선의 진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바탕해 선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다양한 관련 사실의 조각을 모아 다각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객관성의 기본 실행 방식이다. 즉 객관성은 ‘사실(facts)’에 대한 믿음(Schudson, 1981)에 기반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저런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객관적인 취재방법론은 아니며,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 사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한 개념이 ‘사실성의 망(The web of facticity)’이다(Tuchman, 1978). 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관련한 여러 개의 가정된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성의

6) 코바치와 로젠스텔(Kovach & Rosenstiel, 2007)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에서 진실에 대한 의무를 그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7) Washington Post staff (2021, 1, 1), Washington Post company history,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company-history/>



망을 구성해야 한다. 때문에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과학의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재료로 검증의 과정을 반복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같이 엄밀한 방식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객관성은 언론이 달성하기에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칙이라는 목소리도 있다(Ward, 2015). 그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고 전달하는 방식, 즉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He said, she said) 식으로 사실의 조각을 단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질돼 실행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왜곡된 추상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오용의 예는 기계적 중립이다. 즉 사안의 이쪽과 저쪽을 보여주는 사실을 나열하며 객관성을 실천하는 척하는 접근법이다. 민디치(Mindich, 1998)는 객관성의 오용을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명백히 한쪽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언론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들로부터 수집한 사실을 나열하는 기계적 중립을 취함으로써, 보도 내용이 도리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19세기말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 대상 린치 사건 보도를 예로 드는데, 당시 <뉴욕타임스>는 린치의 희생자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보도해 객관성을 추구하는 장치로 사용된 것 같지만, 실상은 린치라는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Mindich, 2002). 언론의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도 벤클러 등(2018)은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의 원칙을 잘못 실행할 때 허위정보, 심지어 프로파간다에도 발언의 기회를 주게 되고, 허위정보가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즉, 왜곡된 객관성 추구는 기자들에게 어떤 사실이건 보도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본래 객관성의 원칙은 사실을 모으고 그 사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을 모으는 식으로 사실성의 망을 만들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취재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본질은 잊혀진 채 객관성은 손에 잡히는 모든 사실을 다 나열하는 식으로 변질됐다. 사이버 레커가 어떤 내용을 주장했다는 점 자체가 사실이라는 판단에서, 언론은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착각이 기성언론인 사이버 레커 받아쓰기의 또 다른 동력일 수 있다.

그러면 언론은 받아쓰기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사이버 레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위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둘러싸고 지금껏 학계에서 진행된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레커의 폭로 내용과 허위정보는 많은 경우 근거가 없고, 선정적이며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앞서 소개한 테이터앤소사이어티의 보고서(Phillips, 2018)는 사실이 의심되는 정보를 언론이 보도할 경우 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해당 정보 유포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② 사람들이 해로운 정보에 점차 무뎌지며, ③ 언론이 해당 문제 정보의 신뢰를 높이고, ④ 문제를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앞서 기성언론의 사이버 레커 받아쓰기 보도가 왜 특별히 위험한지, 그리고 객관성을 명분으로 아무 사실이 나 보도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사이버 레커의 폭로를 그냥 받아쓰지 말고 검증해 보도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의 모든 폭로를 기성언론이 검증해야 하는 것일까? 이 방식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의 백파이어 효과(backfire effect), 즉 팩트체크가 도리어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논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wire-Thompson et al., 2020).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처

리할 때 늘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소위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다. 때문에 팩트체크 보도가 'OOO라는 폭로가 있었다. 검증해 보니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렸더라'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실과 허위를 걸러내 보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 도리어 'OOO라는 폭로' 관련 정보만 받아들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던 기사가 도리어 허위정보를 더 널리 퍼져 나가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존에 해당 허위정보를 이미 접한 적 있거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욱 허위정보 내용에만 집중해 정보를 처리하고, 그 결과 허위정보에 대한 인지나 믿음의 수준이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질 정보에 대해 보도하지 않을 때도 역시나 문제가 존재하는데 ① 계속해서 더 나쁜 정보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②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지독한 딜레마의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① 해당 정보가 특정 그룹을 넘어 널리 확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②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으로써 시민들이 배울 점이 있는지, ③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행동이 있는지, ④ 이 허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더 중요한 거짓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이 모든 상황에 해당할 때 허위정보를 보도하라고 조언한다. 이 조언의 핵심은 허위정보의 보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레커 폭로 보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배우 김새론 사망 이후 사이버 레커의 폭로 상황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해당 정보는 엄청난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한 터라 특정 그룹을 넘어서 확산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알려진다고 해서 시민들이 특별히 배울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동이나 밝혀질 중요한 거짓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언론이 사이버 레커의 폭로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해서 연예뉴스 보도에 대한 보도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이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언론이 지속가능한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또 뉴스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소위 '제로

클릭'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조회수와 그에 따른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요 기성언론이 보도를 자제한다고 해도 어차피 포털 중심 국내 뉴스 시장에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이 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인 터라, 과연 전반적인 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보도를 통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언론이라면, 사이버 레커 받아쓰기는 자제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음에도 언론인을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 같은 윤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금준경 (2024, 7, 17). 또다시 논란의 사이버레커, 유튜브도 방송법 적용 해야 할까.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22>
- 김춘식·홍주현 (2020).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의 뉴스화': <고성산불> 관련 정치적 의혹 제기와 청와대 반응 사례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2호, 403-439.
- 노지민 (2025, 5, 9). 유튜브, 연예뉴스 핵심 취재원이 되다.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150>
- 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3, 24). 가세연·이진호 사생활 폭로 '복불복' 악성 유튜브 확산기 언론.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241
- 박서연 (2025, 3, 28). 과열된 김새론 유족회건 생중계 경쟁... "KBS·연합뉴스 TV도 참여, 개탄스러워".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234>
- 양정애 (2024). '사이버 레커(이슈유튜버) 제작 유명인 정보 콘텐츠 이용 경험 및 인식. <미디어 이슈>, 10권 1호, 1-15.
- 최진웅 (2024, 10, 21). 사이버레커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331호. URL: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695>
- Benkler, Y., Faris, R., & Roberts, H. (2018). *Network propaganda: Manipulation, disinformation, and radicalization in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Three Rivers Press.
- Mindich, D. T. (1998).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NYU Press.
- Mindich, D. T. (2002). September 11 and its challenge to journalism criticism. *Journalism*, 3(1), 22-30.
- Phillips, W. (2018). *Oxygen of amplification: Better practice for reporting on extremists, antagonists, and manipulators online*. Data & Society, <https://datasociety.net/library/oxygen-of-amplification>.
- Schudson, M. (1981).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Basic books.
- Swire-Thompson, B., DeGutis, J., & Lazer, D. (2020). Searching for the backfire effect: Measurement and design consideration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9(3), 286-29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The Free Press, New York
- Ward, S. J. A. (2015).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The path to objectivity and beyond*. McGill-Queen's Press-MQUP.